

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

- 아동학대처벌법(약칭)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신고로 인한 2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정책지원 방안 모색

I 행사 개요

- 주 제: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 방안 모색
- 일 시: 2022. 11. 30. (수) 15:00~17:00
- 장 소: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(301호)
- 주최/주관: 대전광역시의회
- 참 석: 18 명 (토론 8명, 방청 10여 명)

좌 장	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
주제 발표	이애란 대전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
토 론 자	김대권 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민서 법무법인 총청 변호사 김익중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지윤 건양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소장 최은결 수림어린이집 원장
주요내용	◦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사실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, 신고로 인하여 업무방해(협박)는 물론 보육교사의 정신적 피해 발생 ◦ 그로 인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※ 보육교직원 신고 비율 0.5% (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) ◦ 적극적인 범죄 예방과 신고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 필요

※ 토론자 순서는 '가나다' 순입니다.

※ 담당자 : 입법정책실 임현정(5185)